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
로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시리
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 강좌' 시리즈의 34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정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강성대국의 내용과 한계를 파
악하고 강성대국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반드시 통일
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uniedu.go.kr/ebook

이 책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contents

제1장	강성대국론의 등장	06
	1. 강성대국론의 개념	06
	2. 강성대국론의 등장 배경	11
제2장	강성대국론의 내용	24
	1. 사상강국	24
	2. 정치강국	26
	3. 군사강국	28
	4. 경제강국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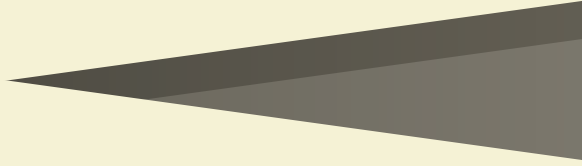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제3장	강성대국론의 전개과정	36
	1. 강성대국론의 변화 : 강성대국 목표시한을 중심으로	36
	2. 강성대국론의 구체화 과정	44
제4장	강성대국론에 대한 평가와 전망	56
	1. 강성대국론의 기능과 한계	56
	2. 강성대국 실현 전망	74
제5장	맺음말	84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4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 제 1 장 ■

강성대국론의 등장

1. 강성대국론의 개념
2. 강성대국론의 등장 배경
 - 1) 사회주의권 붕괴
 - 2) 김일성 사망
 - 3) 전대미문의 대기근





■ 제 1 장 ■

강성대국론의 등장

1. 강성대국론의 개념

북한은 ‘강성대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나라”라고 정의한다.¹ 이 개념 정의는 북한에서 신성시되고 있으며, 강성대국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이 손수 정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강성대국을 한자(漢字)로 표기하면 강할 强과 성할 盛을 사용하여 强盛大國으로 쓴다. 국력이 강력하고 장성한 대국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조점을 둔다. 즉, 대국을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수, 경제발전의 정도, 그리고 군사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서구 중심적 기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진정한 대국은 군사적 대국(강국), 경제의 대국(강국) 차원이 아니라 “인민중심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인민에 대한 배려를 최상의

1 오현철, 「선군과 민족의 운명」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239.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스스로 인민중심이라고 지칭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정의를 내린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지킬 수 있고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이를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 군사, 경제적 힘을 가진 나라”²

대국에 관한 위와 같은 북한의 정의는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적으며, 경제력이 형편없는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 자기 합리화의 결과로 얽혀진다. 결국 북한이 자기 합리화의 결과로 제시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실히 지키는 것도, 인민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북한의 현실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인민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참고로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강성대국’의 영어 번역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달라졌다는 것에 주목했다. 외무성은 ‘prosperous and thriving’으로, 군부는 ‘powerful and strong’으로, 최고인민회의는 ‘strong and prosperous’로 번역하는 등 기관마다 강성대국을 달리 번역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강성대국을 편의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2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p.3.

3 「유코리아뉴스」, “北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 표기 의미,” 2011.12.28.

북한은 강성대국의 국가성격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공식적으로 호칭한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하여 자본주의적인 정치방식과 경제관리방법을 본따거나 도입한다면 사회주의 자체가 변질되거나 붕괴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북한은 김정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성격과 더불어 본질적 특징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명시해 주었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첫 번째 본질적 특징은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한다. 북한은 “강한국력은 나라와 민족,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하면서 “강성대국은 제국주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하여 나라와 민족, 인민의 자주성을 수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다.

그리고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며 그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강국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어 사상의 위력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나라,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시대의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이다. “정치강국은 령도자의 주위에 전체 민중이 철석같이 일심단결된 튼튼한 정치적 역량에 의거해서 철저한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군사강국은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도 일격에 타

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무적필승의 나라”이다. “경제강국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이며,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다.

위의 네 가지 강국이 실현된 국가가 ‘진짜 강성대국’이고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서만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이러한 강성대국 실현이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대국들은 정치대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별히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정치대국이 못되는 것처럼 자본주의 대국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강성대국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두 번째 본질적 특징은 ‘모든 것이 흥하는 나라’라고 한다. 북한은 “흥한다는 것은 나라가 융성번영하여 인민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이 나라와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각적으로 높은 열성을 발휘하여 일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흥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즉,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적 우월성이 본질적 특성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앞에서는 구차해지고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그들도 역시 사회주의 사회였고 인민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본질적 특징은 ‘세상이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는 나라’라고

한다. 여기서 부림없는 생활이란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정신적 재부가 완전히 충족되는 생활”을 의미한다. 결국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국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민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의 생활과 결부시킨 강국 또는 대국은 없었으며, 주로 경제규모나 생산량에 대해서만 염두를 두는 것이 강국과 대국의 일반적 견해라고 주장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떠세우시려는 인민이 세상에 부림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란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기와 집에서 살려는 민중들의 세기적 념원을 실현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서 근심걱정을 모르는 나라, 아들딸 공부시킬 근심걱정, 병이나도 치료받을 근심걱정이 없는 나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이상국이라 하겠다.”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상국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토피아와 같은 말이다. 유토피아란 대개 실현 가능성보다는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이상국’으로 묘사함으로써 스스로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강성대국이라는 이상향, 즉 목표문화를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이문화를 양산하여 북한

4 김재호, 앞의 책, p.12.

주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⁵ 예를 들면,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담론으로써 선군정치와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 배우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요약하자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란 자본주의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이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영토의 크기, 인구의 수, 경제력,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대국의 개념과 달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국가가 대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사회주의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서구 자본주의 대국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 강성대국론의 등장 배경

북한은 199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공식 마감하고 ‘주체의 강성대국’이 혁명과 건설에서 당면한 목표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로 규정하였다.⁶ 고난의 행군이 위기극복을 위한 행군이라면 사회주의 강행군은 혁명과 건설의 재도약을 위

5 목표문화와 전이문화에 대해서는 Anthony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를 참조할 것.

6 「로동신문」 사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 1998.2.3.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과 관련한 표현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 1997년을 고난의 행군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행군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를 지닌다. 북한 지도부는 고난의 행군으로 지친 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인민들을 동원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⁷ 실제로 북한은 “우리의 후대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천박한 부러움이 없이 이 땅우에서 태어난 조선민족된 행운을 영원히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도록 우리 세대도 그 어떤 천신만고도 달게 여기며 기어이 주체의 대강국을 웅장하게 일떠세울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⁸ 동시에 명실상부한 김정일 정권의 출범에 대비하여 김정일 정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 군중집회의 평양 시민들

한편, 1998년에 들어서 고난의 행군은 끝났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경제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은 여전히 위기관리 담론으로서 효과적이었다. ‘죽음도 두려워 않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정신’을 주 내용으로

7 이기동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25.

8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1998.8.22.

하고 있는 강계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어 창조된 정신’으로 규정⁹한데서 혁명적 군인정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강성대국론의 등장은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제시와 위기의 관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을 수밖에 없었다.¹⁰

북한 지도부가 굳이 강성대국이라는 담론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이미 북한주민들에게 식상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세상으로 치부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성대국이라는 새롭고 신선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둘째, 강성대국은 열심히 일하고 참고 견디면 가까운 장래에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난관을 겪고있지만 멀지 않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습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이나 “강성대국은 우리의 눈앞에 바라보인다. 우리의 포부는 몇세대후에 빛을 볼 료원한 꿈이 아니며 단순한 리상만이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¹¹

북한이 북한주민들에게 체제와 국가의 미래에 대해 큰 충격을 안겨 주어 새로운 국가목표이자 위기극복 담론으로 강성대국론을 제시하게 된 주요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9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강계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 2000.4.22.

10 이기동 외, 앞의 책, pp.25-26.

11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1998.8.22.

1) 사회주의권 붕괴

북한처럼 폐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제도 흔치 않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정권과 주민들에게 체제유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북한정권은 사회주의권 붕괴의 영향이 내부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사상적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주민들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에 관한 소식이 북한주민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공식 매체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련 논문들은 이 사건에 대한 비판적 내용으로 도배하였고 내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논조들이 대부분이었다.

첫째로 북한의 공식 매체들과 논문들은 사회주의권 붕괴의 원인을 사상의 약화와 변질에서 찾았다.

“만일 쏘련이 당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더라면 당 안에 혁명의 배신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쏘련이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중략…동구라파 국가에서도 당이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당원과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았고 사대주의와 숭배주의에 젖어 쏘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¹²

1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274-275.

둘째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의 원인을 사대주의와 숭배주의의 결과로 보았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못한 탓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동구라파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잘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구라파 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치도 서방세계가 자기들을 먹여살려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동구라파 나라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게 된 것은 동구라파 나라들에 세워진 사회주의가 그 나라 인민들 자신이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¹³

셋째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관료주의의 팽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에서는 관료주의를 착취사회에서 관료배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인민적 통치방법이자 인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날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 지도자들은 군중 속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사무실 천정이나 모스크바를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였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현실에 맞지 않은 자기의 주관적 의사를 대중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료주의적으로 통치하여 인민들과 이탈되었으며 결국 사

13 김일성, '민족올림픽위원회회 협회 위원장인 메히꼬출판회사 위원장 겸 사장일행과 한담화,' 「김일성저작집 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149-150.

회주의를 망하게 하였다.”¹⁴

넷째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의 원인을 당의 영도적 역할이 약화된 데서 찾았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좌절을 초래한 사회주의 집권당의 변질과정이 노동계급 당 건설의 혁명적 원칙을 포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맑스-레닌주의 당 건설이론을 발전시킨다는 구실 하에 혁명적 본질을 훼손하고 당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당의 영도적 기능을 마비시켰다.”¹⁵

북한정권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원인을 이상의 네 가지에서 찾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상적 단속 및 강화에 착수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권 붕괴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였지만, 북한정권이 왜곡하고 채색한 정보와 선전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사상·선전 작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은 물론 당·정·군 간부들까지 노동당의 ‘사상 무장 교양 사업’에 극도의 불만과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당 사상 사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서방 세계의 자유로운 생활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 침습·

1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382.

15 김정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8.

전파된 데 따른 ‘의식의 변화’로 전해지고 있다.…이로 인해 최근 북한 각지에서는 체제 비판성 유인물이 살포되고 낙서, 투서 등이 성행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저항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주재하는 공관원들은 ‘이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했다’고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데다, 열악하고 초라한 공관생활로 인해 ‘차라리 조국을 바꾸고 싶다’는 말까지 내뱉고 있다.”¹⁶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권의 붕괴 사실에 대한 접근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공식적 가치 지향에 입각한 사상·선전보다는 사회주의권 붕괴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권 붕괴 사실로부터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현실에 대한 회의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공산주의 대신에 새로운 국가목표로 강성대국을 내세우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김일성 사망

1994년 7월 8일 거의 50년간 북한 사회를 통치해 온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김일성의 사망이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은 수령은 신과 같은 존재이므로 영생할 것으로 믿었고, 수령은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 존재이며, 오로지 수령만을 믿고 따르도록 오랫동안 극단

16 「내외통신」, 1996.2.29: E1-E2.

적인 정치교화를 받아왔다. 그래서 민족의 태양이자 인민의 아버지인 수령의 갑작스런 죽음은 북한주민들에게 더 충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정권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권력공백과 북한주민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한 선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호를 통해 주민들의 동요를 조기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김정일 동지는 곧 김일성 동지이다’라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일체화시키는 구호를 만들어 권력공백에 따른 체제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수령의 카리스마 전이를 통해 수령 사망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서방세계에 공개하였다. 이를 본 서방세계는 김일성 사망 소식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를 두고 북한주민들의 진심어린 행동이라는 평가와 북한정권의 통제로 인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갑론을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탈북자들의 견해를 참조한 결과, 진심어린 행동에 가깝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우세하였다. 탈북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지만, 김정일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⁷ 그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적어

17 한 탈북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은 ‘위대한 혁명가’, ‘사상이론가’, ‘탁월한 령도자’,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란·강동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2009), pp.14-17.

도 북한체제가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진 원인을 김정일이 통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장기간의 신격화와 김일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를 고려할 때,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3) 전대미문의 대기근

북한 사회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농법’ 및 사회주의 집단 영농 생산방식의 모순 등이 누적되어 발생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급량을 줄이거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식량 부족을 충당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지원 단절, 농업 관련 물자와 기술 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 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격감하였다. 더구나 1995년도 이후 3년 연속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업 생산이 붕괴되어,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1997년 동안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였다.¹⁸

이 결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일컬어지는 전대미문의 대기근을 겪었다. 북한 스스로 ‘유사 이래 최대의 국난’으로 정의한 이 사건으로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직접적인 아사나 기근에 따른 질병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한국 측 통계는 추산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자연재해가 대기근의

18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 변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p.102.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조적 경제난이 초래한 식량수급의 문제를 감추고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량의 급격한 감소와 가족의 아사라는 처참한 현실은 북한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우회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¹⁹ 첫째는 극도의 체념이었다. 일반 주민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일종의 도피 내지 패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 강구였다. 북한주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였고, 만사를 제치고 식량을 구하러 다녔다. 셋째는 일탈행위의 유혹에 쉽게 빠졌다. 사소한 식량과 일용품 절도행위와 국가재산에 대한 절취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반응들은 대기근이 가져온 육체적 고통의 결과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기근이 몰고 온 북한주민들의 정신적 충격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북한주민들에게 외상으로 남았다. 굶주림으로 인한 가족과 친척들의 죽음, 꽃제비로 전락한 자식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나홀로 생존을 위한 처절할 몸부림과 같은 언어들은 이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표징이 되었다. 이러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반사회주의적 정서의 단초가 되었다. ‘백성이 굶어죽는 사회주

19 이은숙, “북한주민들의 생활상과 의식 변화 전망,” 『월간 통일경제』 (1996.8), pp.4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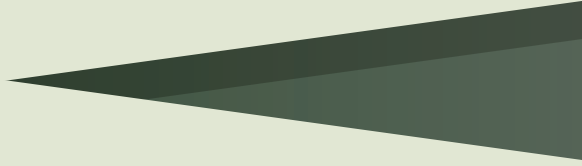
의가 무슨 사회주의냐'라는 원성이 등장하였고, 당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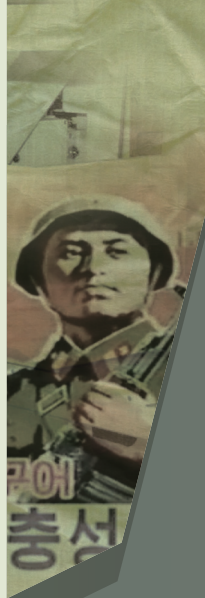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이 '고난의 행군'기에 경험한 각종 난관은 최소한의 기본적 생존 차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식량의 곤란을 매일 경험하면서 혈육의 죽음과 질병을 목격하는 과정은 중대한 심리적 외상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한 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거나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통제 하에서 북한주민들은 당국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하지 못하며, 이를 내면적으로 품고 있게 됨으로써 좌절과 심리적인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⁰ *

20 이인정, 앞의 책, p.104.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4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 제 2 장 ■

강성대국론의 내용

1. 사상강국
2. 정치강국
3. 군사강국
4. 경제강국



강성대국론의 내용

1. 사상강국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결정론에 입각하여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을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사상강국은 강성대국의 기본징표이므로 사상강국 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줄 것을 독려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사회주의 국가의 위력이 사상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적 우월성이 사상의 우월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사상이 강성대국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심어주고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양시킨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은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치게 하는 단결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사상강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나라가 바로 사상강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는 곧 김정일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로 귀결시킨다. 결국 김정일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가 바로 사상강국이라는 논리로 연결된다.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김정일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사상강국이라는 논리다.

둘째, 사상강국은 북한이 가장 숭고한 정신으로 꼽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에 해당하므로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령을 결사옹위해야 수령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는 인민대중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바로 이런 논리 속에서 수령을 위한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비롯된다. 한편, 이러한 수령을 위한 희생정신과 더불어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인민이 수령의 영도적 지위를 옹위해야 한다는 충성심과도 연계된다. 수령의 권위를 보장해야만 수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셋째, 사상강국은 온갖 반동적 사상들과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철저히 차단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사상문화적 침투를 집요하게 감행해서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루로써 사상강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상강국은 노동계급 의식과 반제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나라라는 것이다.

2. 정치강국

북한은 정치강국 건설을 강성대국 건설의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혁명은 정치적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실현되고 공고화된다고 강조한다. 둘째, 정치가 사회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이 직접 정치에 의존하므로 나라의 운명은 결국 정치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치강국 건설이 주되는 과업으로 나서는 이유는 혁명이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이고 정치가 사회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정치강국을 “자주로 존엄 높고 단결로 위력하고 공고하며 세계정치무대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대국”이라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강국은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주정치란 ①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 자기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 ② 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정치, ③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정치, ④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정치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여 자주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정치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²¹

둘째, 정치강국은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나라,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된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서 단결의 정치는 자주성을 지향하고 애국, 애민, 애족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라고 한다. 여기에서 누구나의 범주에는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 과거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불문하고 포함된다고 한다. 이들의 일시적인 잘못과 오류만을 보고 배척하면 결국 반혁명세력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그리고 “단결의 정치만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온 민족을 하나로 결합시켜 정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단결의 위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북한은 단결의 정치란 곧 수령, 당, 대중이 하나가 되는 일심단결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정치강국은 세계정치무대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나라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정세를 주도적으로 유리하게 조절해 나갈 수 있고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관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강국은

21 철학연구소,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p.36.

탁월한 정치가, 탁월한 수령에 의해 건설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정치강국이란 김정일이 통치하는 국가로 귀착시켜왔다. 그런데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 북한이 내세우고 싶은 정치강국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마도 ‘혁명위업 계승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 군사강국

북한은 군사강국 건설을 강성대국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 그 이유는 ① 군사력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고 국력을 강화하는 확고한 담보이고, ② 북한이 처한 현재의 혁명 조건과 정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군사강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첫째, 군사강국은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된 나라라고 한다. 여기서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라고 규정한다. 한마디로 선군정치외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북한은 ① 선군정치의 철저한 구현과 군사선행의 전략적 노선 견지, ② 모든 분야에서 군중시사상 철저히 구현, ③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군사강국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북한은 소련이 붕괴한 이유를 소련군대의 비정치화, 비사상화에서 찾았다. 그리고 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은 군대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제일 결사대가 되며, 계급의식이 높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군대가 군사기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되었다는 것은 전군이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것을 말하며,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셋째, 군사강국은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민이 무장한 나라라는 것이다. 전국요새화는 현대전의 전면전적(全面戰的) 성격, 영토 크기의 소규모 여건을 고려할 때 사활적인 문제이며, 전민무장화는 정규군을 주축으로 한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나라 전체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미고 전 인민이 총대를 사랑하는 국가가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군사강국은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나라라는 것이다. 다

시 말해서 군민일치를 이룬 나라를 말한다. 군민일치는 혁명적 군인 정신에 입각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고, 전체 사회에 용군애민의 미풍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군민일치를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군사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4. 경제강국

북한은 경제건설을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에 기초하여 경제적 힘이 뒷받침된 나라가 명실상부한 강성대국이라는 것이다. 경제강국 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과업이 되는 이유는 첫째, 경제가 나라의 위력을 담보하는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람은 물질적 재부가 풍족해야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가능하며 경제의 발전이 이러한 물질적 재부를 보장해 준다는 논리다. 그리고 경제발전은 군대를 현대적 장비로 무장시키는 등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둘째, 강성대국 건설이 제국주의와의 경제적 대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경제적인 고립압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제국주의와의 경제적 대결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논리다.

북한이 그리고 있는 경제강국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즉, 경

제가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건설되고 발전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를 가진 나라는 우선 경제가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나라로 규정한다.²² 또한 경제의 부문구조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완비된 나라라는 것이다. 즉,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원료생산에서 완결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의미다.



■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

둘째, 경제강국은 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화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즉, 경제의 현대화란 선진화된 기술을 토대로 경제의 모든 기술장비들이 현대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을 말하며, 과학화란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이 높은 과학적 토대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은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대외경제분야에서도 당당한

22 철학연구소, 위의 책, p.55.

지위를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데서도 경제발전의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경제강국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경제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즉, 경제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높은 수준에서 원활히 제공해주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익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 인민경제에서 가능하며, 자본주의 경제는 극소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경제라고 비판한다.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강국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보다는 자주성과 창조성과 같은 추상적 언어로 피해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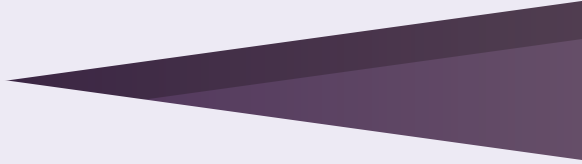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상강국이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이며 반동적 사상과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는 나라이다. 정치강국이란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며 국제정치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나라이다. 군사강국이란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며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민이 무장하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일심단결된 나라이다. 경제강국이란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를 가지며 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화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 있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4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강성대국론의 전개과정

1. 강성대국론의 변화 :

강성대국 목표시한을 중심으로

2. 강성대국론의 구체화 과정

- 1) 3대 진지론
- 2) 3대 기동론
- 3) 4대 제일주의



에박차를기하여
성대국건설

강성대국론의 전개과정

1. 강성대국론의 변화 : 강성대국 목표시한을 중심으로

북한은 199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전국자력갱생모범 일군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혁명과 건설에서의 당면 목표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론이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화된 것은 1998년 8월 22일 정론 ‘강성대국’을 통해서였다. 무려 1만 580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정론이었다. 이어서 1998년 9월 9일 정권수립 50주년 기념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를 발표함으로써 강성대국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강성대국, 엄밀히 말하면, 경제강국 조기실현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몇해동안 간고한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조건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가까운 앞날에 실현할 수 있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여 조기실현 가능성을

내비쳤다. 무엇보다도 강성대국의 최정상을 정복한다는 의미에서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점하자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전기문제와 식량문제를 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이른바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여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1998년 정보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으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의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우선적 역량을 집중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1〉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임금	18배 인상. 분배의 평균주의 배제.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물가	평균 25배 인상. 쌀 1kg의 판매가격 8전에서 44원으로 550배 인상
환율 현실화	달러당 2.2원에서 135원으로 인상
기업	지배인 중심의 책임경영 및 독립채산제 강화
경제계획 권한	전략적·국가적 중요 지표는 국가계획위, 세부지표는 해당 기관·기업소로 이원화
무상지원 개선	무상공급·국가보상 등 각종 혜택 폐지. 무료교육·무상치료·사회보험 등은 유지
개인경작지 확대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그리고 북한은 이 시기에 주로 선군사상의 일색화와 체계화(2004. 12. 22 선군사상에 관한 전국연구토론회)를 부각시킴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당·군대·인민 간의 일심단결이 확고히 완성되었다고 자랑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핵보유 선언, 2006년 1차 핵실험을 통해 군사강국 실현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한편 2000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고, 북한은 강경대응의 일환으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2년 10월 2차 핵위기가 발발하였고,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2006년 핵실험 실시로 이어졌다. 이 결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악조건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악조건은 사상강국 실현을 위한 대내결속과 군사강국 과시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었지만, 경제강국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추진 3년만인 2005년 말부터 후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사이에 북한의 언론매체들에서는 기존의 ‘강성대국의 영마루’가 사라지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자’라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하였다. 2012년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원년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



■ 북한 공연 중의 강성대국 구호

은 기존의 강성대국의 영마루(최정상)으로의 직행에서 새로운 단계 또는 과도기적 단계로서의 대문(관문)을 설정한 것으로 1998년 강성대국론을 제창한지 꼭 10년만의 일이다. 이것은 경제강국 건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담론적 차원에서 표명한 것이다.

2008년은 강성대국 목표 선포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과학기술발전 2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 시점에서 강성대국의 대문 진입이라는 과도기적 목표를 내세운 것은 역시 2012년까지 경제강국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1998년 제시한 경제강국의 모습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성대국의 대문이란 정치·사상의 강국과 군사강국에 더하여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3대 기둥의 하나인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경제강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제강국 달성을 목전에 두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과도적 단계 설정에 따라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회생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50년대의 정신으로 살자’(자력갱생), 2009년 ‘천리마 대진군’을 강조하더니 ‘150일 전투’, ‘100일 전투’와 같은 대규모 주민노력동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09년 말에 화폐개혁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결국 북한주민들, 특히 시장세력의 큰 반발을 야기하였고 이듬해인 2010년 3월에는 김영일 내각총리가 평양시 인민반장들을 모아놓고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화폐개혁을 통

해 시장을 통제하고 국가계획을 복원하려던 당국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화폐개혁의 후폭풍은 북한의 강성대국 대문진입 로드맵에 큰 차질을 빚도록 만들었다.

〈표 2〉 화폐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대 1의 비율로 현 돈과 새 돈을 교환 - 새 돈은 종이돈 9종, 주화 5종 - 은행에 저금한 돈은 10 대 1 비율로 교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 - 경제의 공식부분 정상화와 계획경제 관리질서의 강화 - 시장의 억제
향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은 2002년 7월 1일 수준으로 유지(쌀 1kg의 국정가격 45원) - 생활비도 종전의 수준을 보장(사무직 근로자 월급 3000원 수준) - 상점과 식당 등에서 외화 유통 금지

화폐개혁 조치의 실패와 더불어 강성대국 대문진입에 차질을 빚은 또 하나의 요인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이었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은 2008년 9월 정권 창건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불참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얼마 되지 않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의 치료를 담당했던 프랑스 의사 프랑수아 자비에르 루 박사는 당시 김정일의 상태가 혼수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²³ 김정일의 심각한 외병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후계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이를 위한 내부절차를 준비하고 착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후계자의 약관의 나이와 일천한 경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격적 리더십의 부족과 한계를 메우고

23 「연합뉴스」, 2011.12.20.

뛰어넘는 일이 시급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2009년 1월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후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그 해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체계를 정비하였다. 2010년 9월에는 44년 만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당규약을 개정함과 동시에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앉힘으로써 후계자로 공식화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내부준비는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내부안정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민심의 동요, 김정일의 심각한 와병과 이에 따른 후계체제의 신속한 구축은 대외정책에서도 강경한 정책으로 발현되었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5.24 대북제재를 받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11월 21일 헤커박사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공개하여 세계를 경악하도록 만들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결국, 대내결속의 필요성과 후계체제 구축이라는 내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 태도는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

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하여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풍족한 지원보다는 살만큼 적당히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요약하면, 2008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영마루’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목표를 하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심각한 와병과 후계체제 구축의 시급성, 그리고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민심의 동요와 이반으로 인해 경제문제보다는 정치안정 및 대내결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더욱이 대내결속 차원에서 취해진 대외 강경 행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와 공분을 야기하여 북한경제를 더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강성대국의 대문이 아닌 새로운 문패를 달도록 강요받았다.

2011년 6월 18일 김정일 당사업 개시 4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있었던 김기남 당비서의 보고를 통해 ‘강성국가’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등장하였다.²⁴ 이후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강성국가’와 ‘강성대국의 대문’이라는 표현을 혼용하다가 2011년 8월 15일자 노동신문 사설 ‘위대한 김일성 조선을 후손만대에 빛내여 나가자’가 발표된 이후부터 강성국가라는 표현의 출현 빈도가 높아졌다. 강성대국 대문과 강성국가는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경제강국이 빠진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에 과학기술강국이 더해진 내용을 갖고 있다. 다만 ‘대국’이 일반적인 ‘국가’로 변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북한이 말하는 대국이란 다방면에 걸친 강국을 의

24 비공식적으로 최초 등장한 것은 하루 전인 6월 17일 노동신문 개인 논평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귀한 정신적 양식”에서였다.

미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2012년 4월까지 경제강국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논리적 모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강성대국의 변화 과정²⁵

연 도	강성대국과 관련된 구호들
1999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역사의 해
2000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총진격의 해
2001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역사의 해
2002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전변의 해
2003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해
2004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보람찬 투쟁의 해
2005	강성대국 건설연대기에 위대한 전환의 해
2006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린 금지높은 해
	1차 핵실험(강성대국 논리의 진화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기능)
2007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
2008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2008년 12월에 천리마제강에서 12월 호소 강조)
2009	강성대국의 기반을 마련한 해(2차 핵실험, 김정은 후계낙점)
2010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침단을 돌파하자
2011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6.18 김정일 당사업 개시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강성국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
2012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자

25 차문석,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한 전략,” 『사회과학』 제43권 제1호, 2011, p.20에 기초하여 보충.



■ 강성대국 건설을 독려하는 선전화

2. 강성대국론의 구체화 과정

강성대국론의 내용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은 기존 또는 새로운 담론들과의 융합 또는 재생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것은 3대 진지론(1996), 3대 기동론(2000), 4대 제일주의(2002)와 관련이 있다.

1) 3대 진지론

먼저 강성대국론은 3대 진지론과의 융합으로 볼 수 있다. 3대 진지론은 1996년 신년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시기는 기존의 3대 혁명(사상, 기술, 문화) 구호와 그것의 실천운동인 3대혁명소조운동이 김일성 사망을 전후로 쇠퇴하던 때이다. 3대 진지론은 당시 김정일의 혁명사상으로 제시했던 붉은기사상²⁶의 실천과제로써 정치사

26 붉은기사상은 주체사상의 김정일식 변용이론으로써 북한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나아가 조선혁명, 즉 통일을 완성하자는 논리임. 전현준 외, 「북한의 승계정치 동향: 2.16 생일행사를 중심으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4.

상적 진지,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3대 혁명과는 다르다. 오히려 3대 진지는 그 내용 면이나 형식 면에서 강성대국론 속에 융해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1996년 공동사설에서 제기된 ‘우리식 사회주의 3대 진지론’은 1998년에 강성대국론으로 정식화된 것이다.²⁷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3대 진지와 3대 강국의 구성이 동일하다. 정치사상적 진지, 군사적 진지, 경제적 진지가 각각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치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정치사상적 진지에서 “사회주의 불패의 원천이며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놓치면 망한다”, 경제적 진지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고 자립적 경제토대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그리고 군사적 진지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라는 논리체계도 비슷하다. 다만, 붉은기사상의 3대 진지론에서는 혁명의 주체가 여전히 노동계급인 반면, 강성대국론에서는 군대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3대 진지론에서는 경제적 진지가 군사적 진지보다 순서상 앞에 있으나, 강성대국론에서는 군사강국이 경제강국보다 선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3대 기동론

북한은 2000년 신년공동사설 ‘당창건 55돛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에서 강성대국 건

27 차문석, 앞의 책, p.21.

설 목표의 전략적 노선으로서 3대 기둥을 제시하였다. 3대 기둥이란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말한다. 북한은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강성대국이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사상중시 노선이다. 북한은 사상이 사회주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상적 진지가 무너지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주의가 변질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사상중시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은 본래 김정일의 사상을 실현하는 과업이므로 사상중시 노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사상중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불패의 위력을 낳는 근본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은 또한 사상중시 노선을 확고히 견지함에 있어서 ① 김정일의 혁명사상을 강성대국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②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이를 철저히 구현하며, ③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독약과 같다”는 인식하에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한다.²⁸

둘째는 총대중시 노선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운명을 지키고 강성대국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총대중시에

28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0.1.1.

있다고 주장한다. 총대중시란 “평화도 사회주의도 총대위에 있다는 신념하에 국방력 강화에 선차적 힘을 넣고 전 사회적으로 군사를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조국도 지키고 평화적 건설도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강성대국 건설에서 총대중시 노선을 구현해야 하는 이유는 총대중시가 이라크전쟁이나 유고전쟁과 같이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며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 담보이고, 군대가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주력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강성대국 건설에서 총대중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① 군대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②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을 세우며, ③ 군대를 관병일치의 미풍으로 충만한 혁명적 동지애의 결정체로 강화하고, ④ 항일유격대식 훈련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과 논리의 이면에는 ‘경제는 한번 망가져도 회생이 가능하지만 군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만이 경제강국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선군정치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 실천과제임을 강조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원동력이다. 오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29 김재호, 앞의 책, p.25.

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것이다. 이 거창한 과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³⁰

셋째는 과학기술중시 노선이다. 과학기술중시 노선이란 강성대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은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과학혁명노선이며, 나라의 모든 힘을 과학기술발전에 집중할데 대한 적극적인 과학기술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견지하는 이유는 ① 과학기술중시가 사회주의발전의 기초가 되고, ② 강성대국 건설이 민족경제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③ 시련을 겪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현재의 실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① 전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립하고, ② 과학자, 기술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기여하며, ③ 과학기술을 우리식으로, 주체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강성대국 건설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경제의 모든 부문에 받아들여 자립경제를 보다 더 튼튼히 하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이고 현대적인 첨단과학기술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30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1999.6.16.

웅대한 사업이다.”³¹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본 인식으로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하여 왔다.³²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3대 기동의 하나로 제시된 과학중시사상은 2000년 7월 4일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제하의 노동신문·근로자의 공동논설에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³³ 공동논설은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와 혁명에 대한 태도를 동일시하면서 과학중시사상은 과학선행사상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당의 의도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강성대국은 과학기술의 강국이라는 전제 하에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열쇠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력갱생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에서 주체를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주체를 세우는 것이 폐쇄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서의 3대 기동 또는 3대 중시 노선은 기존의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경제중시 노선이 빠지고 과학기술중시 노선이 포함된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강국 건설이 어렵다는 현실

31 김재호, 앞의 책, p.33.

32 「로동신문」 사설,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 1999.1.16.

33 북한은 1997년과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정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을 인정하는 가운데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으로의 파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북한은 2000년 이후부터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내세우기 보다는 과학기술발전전략 또는 계획으로 대신하다가 2011년에 와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경제개발총국을 발족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제계획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이 강하게 연동되는 북한체제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은 곧 과학기술발전 계획이었다.³⁴ 북한은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2003-2005), ‘산림조성 10개년 계획’(2001-2010)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³⁵

3) 4대 제일주의

북한은 2002년 신년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에서 이른바 ‘4대 제일주의’를 제창하였다. 이 시기 강성대국 건설노선은 4대 제일주의를 내적 논리로 흡입하여 발전하였다.³⁶ 그리하여 “4대 제일주의는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였다. 4대 제일주의는 수령 제일주의, 사상 제일주의, 군대 제일주의, 제도 제일주의를 말한다.

34 변상정,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p.246.

35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체계 개혁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11권 6호, 2004, p.58.

36 차문석, 앞의 책, p.24.

첫째, 수령 제일주의 차원에서는 ① 김일성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②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김일성의 업적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하며, ③ 김정일을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받들 것을 촉구한다.³⁷ 이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예방적으로 차단하고 김정일에 대한 대안적 담론이나 판단을 허용하지 않도록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³⁸

둘째, 사상 제일주의 차원에서는 ①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지고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말아야 하고, ②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대오를 확고히 세우며, ③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제 정신을 가지고 제 힘으로 일떠서며 우리의 노선, 우리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하고, ④ 민족의 이익을 건결히 옹호하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될 것을 독려한다.³⁹ 이는 민족적 담론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도전적 상황이 내부문제와 결부되지 않도록 단속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⁴⁰

셋째, 군대 제일주의 차원에서는 ① 전군에 최고사령관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을 철저히 세

37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2.1.1.

38 차문석, 앞의 책, p.24.

39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2.1.1.

40 차문석, 앞의 책, p.25.



우고, ② 일당백 구호를 높이 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③ 당원과 근로자들은 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해야 하고, ④ 혈연적 군민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⁴¹ 이는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이완된 사회질서를 군대를 통해 재구축하려는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⁴²

넷째, 제도 제일주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재촉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고, ②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다’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방향 속에서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 완성하는 것이 절박한 요구이며, ③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⁴³ 이는 외부세계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북한의 개혁과 개방 가능성에 대한 역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정으로 볼 수 있다.⁴⁴

결과적으로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3대 진지론에 뿌리를 두고 3대 기둥론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으며, 2002년 들어 4대 제일주의와 조우하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1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2.1.1.

42 차문석, 앞의 책, p.25.

43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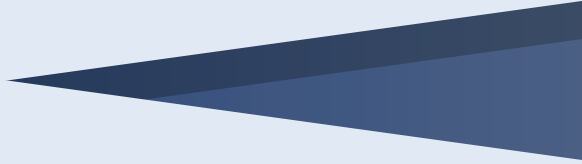
44 차문석, 앞의 책, p.25.



해에 다시한번경공업에 박차를가하여
 생산화하사기 가선대구기설에서경정적지회를일어케
 해에 다시한번경공업에 박차를가하여
 생산화하사기 가선대구기설에서경정적지회를일어케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4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강성대국론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강성대국론의 기능과 한계
 - 1)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과 한계
 - 2) 국가전략으로서의 기능과 한계
2. 강성대국 실현 전망



강성대국론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강성대국론의 기능과 한계

1)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과 한계

강성대국론은 북한체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통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국가전략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통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어떤 행위를 지지하고 주장하는 신념체계로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한 정권의 진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의 틀이다. 또한 정치 이데올로기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엄격한 양단논법을 존재로 일정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목표와 미래의 사회상을 조직적으로 주입시키고 사회적 통합과 분열이 교차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념체계이다.

통치 이데올로기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대개 통치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타인의 지지를 설득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지배적인 신념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프란츠 슈만(Franz Schurmann)은 이데올로기를 관념과 행동의 연결체계로 파악하여 그 연결체계가 간접적인가 또는 직접적인가에 따라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로 분류하였다.⁴⁵ 순수 이데올로기가 가치에 관한 것이라면 실천 이데올로기는 처방, 즉 어떤 행동이 타당한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해주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 이데올로기 없이 실천 이데올로기는 정당화될 수 없고 실천 이데올로기 없이는 그 세계관과 이상을 일관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그리고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순수 이데올로기는 시대와 지역의 특수성을 초월하여 세계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 이념체계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실천 이데올로기는 순수 이데올로기가 특정 국가의 역사적 경험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창조적으로 재해석된 이념체계라 할 수 있다. 김일성주의나 모택동주의 등 각 나라의 특수성에 맞춘 각각의 사회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순수 이데올로기는 이상과 목표이고 실천 이데올로기는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과 방도인 셈이다.

강성대국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에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가 존재하였다. 북한 역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분명한 가치와 이상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45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로 공산주의는 순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김일성주의는 이러한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현실적 수단과 방도로서 생겨난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녀왔다.

여기서 새로이 등장한 강성대국론을 순수 이데올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천 이데올로기로 볼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된다. 강성대국론을 기존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치와 이상으로서의 순수 이데올로기로 규정할 수도 있고, 김일성주의를 보완하거나 새로 만들어진 실천 이데올로기로 규정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순수 이데올로기 또는 목표문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초한다. 첫째, 강성대국론이 등장한 이후 시점부터 북한에서는 동시대를 표현하는 언술이나 담론에서 공산주의가 제외되었고, 둘째, 북한 스스로 강성대국을 ‘영원한 이상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셋째, 2009년 헌법 개정과 2010년 당규약 개정 시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대신 강성대국이 자리 잡았다. 이밖에도 2010년 8월 김정일의 방중 시 동북3성 지역에 있는 김일성의 혁명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북한 공산주의 혁명역사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발상지 카룬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성대국론이 통치 이데올로기 중 순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및 방도로서의 실천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실천 이데올로기는 선군정치와 선

군사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많은 공간(公刊) 문헌을 보면 모든 사업에서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통해 강성대국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과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은 어떤 관계일까?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강국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이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나라가 사회주의 사상강국이다”라고 주장한다.⁴⁶ 이를 보면 강성대국론은 주체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인간의 참다운 본성에 맞는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가 일색화된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사상강국이다”라는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가 곧 강성대국이라는 주장은 주체사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상이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에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라는 주체사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소 모호한 국가목표가 강성대국이라는 보다 명확한 국가목표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목표가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주체사상이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이다.

46 철학연구소, 앞의 책, p.24.

그렇다면 강성대국론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을까? 리차드 솔로몬(Richard Solomon)은 과거 중국공산당이 통치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혁명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면서, 이데올로기의 기능으로 정당화의 기능(legitimacy), 일체화의 기능(identity), 결속화의 기능(solidarity) 등을 들었다. 정당화의 기능은 정치권력 자체 또는 그 권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가 올바르다는 것을 설득하는 기능이고, 일체화의 기능은 체제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거나 강화하는 기능이며, 결속화의 기능은 체제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단합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치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체제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하도록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을 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를 지표로 하여 강성대국론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성대국론은 공산주의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김정일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강성대국론의 등장 시기가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고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정당화하는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1998년 강성대국론이 등장한 이후 강성대국은 대부분 신년공동사설 제목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선군정치와 더불어 공식담론을 완전하게 장악해 왔다. 이와 같이 강성대국이 공식담론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장악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강성대국론은 북한이 처한 제국주의의 포위와 압박이라는 현실과 조건 속에서 사상·정치·경제의 강국과 군사강국을 먼저 실현한 바탕위에 경제강국을 달성하는 길이 올바르다는 논리, 다시 말해서 선군정치의 정당성 논리를 설파하였다. 그리고 군사강국 달성이 대내외적으로 과시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2006년 핵실험 이후 군사부문에서 이룩

한 과학기술 성과를 토대로 인민경제부문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혁명적 대고조’와 같은 담론을 재생산하여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같은 대규모 주민노력동원사업을 정당화하여 왔다.



■ 150일 전투 선전화

둘째, 강성대국론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식 사회주의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이상국가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소속감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강성대국론에서 기존 강대국의 개념과 구별을 시도하고 이미 붕괴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차별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소속감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소속감 고양 차원에서 4대 제일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는 핵실험과 인공위성으로 가장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단행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강성대국론은 이의 실현을 위해 수령·당·군대·인민의 결속을 중요시 해왔다. 1998년 8월 22일자 노동신문 정론은 ‘일심단결’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심단결을 강조한 것은 강성대국론이 위기극복을 위한 담론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은 일심단결을 ‘핵무기보다 더 강위력한 무기’로 표현할 정도로 대내결속을 중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강성대국론은 주민동원을 위한 정당화 기능, 비전과 희망제시를 통한 일체화 기능,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결속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성대국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현실적으로 크게 두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의도한 대로 강성대국론이 위의 세 가지 기능을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에 가까운 현실적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인민생활부문에 가서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현실은 가시적 발전을 뒷받침해 줄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성대국의 수위를 이미 하향조정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일환으로 취했던 정책의 결과



■ 굶주린 북한 아동들

는 인민생활부문에서의 가시적 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세력들이 형성되고 확대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빈부의 격차는 곧 계층의 분화와 차별화를 자극하여 주민결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9년 화폐개혁 조치의 폐단은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체화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강성대국이 추구하는 이상과 북한이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괴리 확대 추세는 강성대국론이 갖고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점차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강성대국론의 사후적 정당화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통치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기능은 사전적 정당화와 사후적 정당화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전자는 특정 이상과 목표를

내세우기 전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이미 벌어진 일을 이상과 목표에 맞게 합리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런데 강성대국론의 이러한 합리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북한은 2012년 4월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중간평가하는 단계, 즉 강성국가 진입여부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강성국가 진입 실패를 자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성국가 진입을 어떤 논리로 합리화하고 그것을 북한주민들이 수용할지의 여부다. 현재로서는 경제부문에서 마땅한 합리화 구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의 합리화 논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강성대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적 기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2) 국가전략으로서의 기능과 한계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21세기의 담대한 설계도’라고 주장하였다.⁴⁷ 동시에 ‘강성대국 건설전략’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한 마디로 강성대국론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이라는 것이다. 국가전략이란 국가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향후 당면할 도전과 기회를 미리 예견하여 국가이익을 실현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제한된 자원을 개발·통합·조정·배분·사용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활동의 추진계획이다.⁴⁸ 이런 맥락에서 국가전략으로서의 강성대국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47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1998.8.22.

48 강성중,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35.

북한이 추구하는 강성대국 건설전략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그 어떤 적도 건드릴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들자는 외적 측면과 전체 민중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부흥국으로 만들자는 내적 측면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충족된 상태를 ‘이상국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국가 실현을 위해 북한은 강성대국론이라는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로드맵을 세우고, 3대 기둥 및 3대 원칙과 같은 구체적 지침을 통해 국가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이상국가, 즉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으로 사상·정치강국 → 군사강국 → 경제강국의 수순을 그리고 있다.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라는 문구 속에서 로드맵이 담겨 있다. 그리고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주장한다. 강성대국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마디로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강성대국이 완성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강성대국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제 궤도에 올라서

서 생산을 광광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⁴⁹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노선으로써 3대 기둥을 제시한다.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가 바로 그것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공주체의 강성대국이 실현된다”는 김정일의 언급이 그 기초가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원칙적 요구를 제시한다. ①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 ② 인민정권의 역할 제고, ③ 근로단체들의 역할 고양, ④ 선군정치 위력 강화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정·군·근로단체들이 강성대국 건설 투쟁에 총진군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체제의 대표적 속성 중의 하나가 집단주의이고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예외 없이 위의 집단 중 하나에 소속되어야 하므로 결국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겠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청사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식의 원칙이다. 북한은 이를 근본원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주체식 또는 김정일식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식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① 정치사상적 위력, 집단주의적 위력, 사회주의적 위력을 발양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② 정치도덕적 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물질

49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454.

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며 계획경제 관리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며, ③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중앙집권적 원칙에서 선후차를 가려 당면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④ 자체의 경제적 토대와 경제적 구조를 살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모든 것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원칙은 자력갱생의 원칙이다. 북한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조건, 즉 제국주의의 포위와 봉쇄 조건 때문에 자력갱생이 강성대국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고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당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위력을 어떻게 발양하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자력갱생의 모범을 창출할 것을 독려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가 과학기술교류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달고 있다. 이어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합병, 합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미 마련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부문에 박차를 가해 점진적으로 회생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른바 “개미가 뼈다귀를 야금야금 뜯어 먹는 전술”로 묘사한다.

“자력갱생이란 자기 나라의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주체적 력



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을 자기 나라의 민중의 힘과 자기의 기술, 자기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 립장이다.”⁵⁰

세 번째 원칙은 실리주의의 원칙이다. 북한은 실리주의란 “나라에 이익을 주고 인민생활에 실제적인 보탬을 줄 수 있도록 경제사업을 조직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강성대국 건설에서 실리주의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이유는 실리주의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원칙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여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은 실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자립적 경제발전도 어렵고 인민의 이익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무엇보다 실리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적은 밀천’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실리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밀천이 부족한 북한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실리주의 원칙은 당면한 현실적 경제상황에서 중대한 요구로 제기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편, 북한은 실리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① 현실적 조건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를 관리해야 하고, ② 과거의 것을 고집하지 말고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생산과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③ 기술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업구조를

50 김재호, 앞의 책, p.95.

변경시키고, ④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실리주의 원칙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일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구 분	내 용
목 표	사회주의 강성대국 : 21세기의 영원한 이상국 - 내적목표: 전체인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사는 부흥국 건설 - 외적목표: 그 어떤 적도 건드릴 수 없는 강국 건설
로 드 맵	사상·정치강국 → 군사강국 → 경제강국 = 강성대국
전략 노선	3대 기둥 :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원칙적 요구	·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 · 인민정권의 역할 제고 · 근로단체들의 역할 고양 · 선군정치 위력 강화
3 대 원칙	· 우리식의 원칙 · 자력갱생의 원칙 · 실리주의 원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사상·정치강국을 시작으로 군사강국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을 실현한다는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 달성을 완수하였으므로 경제강국 달성에 매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 북한은 강성대국론 제창 이후 지금까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체제의 내부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내외 조치들을 취해 왔다.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화폐개혁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에서의 실리주의’, ‘신사고’, ‘과학기술정책과 IT산업 발전전략을 통한 단번도약과 첨단돌파’ 등과 같은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내부자원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제한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왔다. 신의주 특구, 나진·선봉 특구, 개성 경제특구를 비롯하여 최근의 황금평 개발전략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은 이러한 대내 개혁조치와 대외 개방조치라는 이중전략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⁵¹ 언뜻 보면, 북한이 대내 개혁조치와 대외 개방조치가 서로 상보적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단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화폐개혁 조치는 나진·선봉 특구 전략과의 상관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반대로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계획경제체제를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이 서로 상보적이지도 않고, 정치체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모기장식’ 개방과 ‘땀질식’ 개혁으로는 경제강국 건설은커녕 경제 회생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1 이에 관해서는 강성중, 앞의 책을 참조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강성대국론의 국가전략적 기능의 한계를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이 완수되었으므로 경제강국만 실현되면 강성대국이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경제회생에 필요한 내부자원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허점이 있다. 그러므로 부족한 자원과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을 유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재원을 강탈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치적 정당성 확보가 절실한 현실에서 선뜻 택하기 어렵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길로 나서기는 커녕 핵무기 개발과 실험 및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길에 역행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중시 노선은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우리식의 원칙 및 자력갱생의 원칙과 모순된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의 하나로 과학기술중시 기동 또는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발전에 특별히 힘을 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내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과학기술의 축적과정을



■ CNC 선전화

거쳐야 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낙후된 분야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가능하다.



북한은 1990년대 말에는 ‘단번도약’, 최근에는 ‘첨단돌파’를 강조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비약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식’과 ‘자력갱생’의 원칙 관철을 촉구하고 있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부터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로 내세우는 ‘CNC’(컴퓨터수치제어)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방식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의 또 다른 성과로 자랑하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는 질적인 면에서 서구의 표준에 비해 훨씬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은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선동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체제의 개혁과 개방 없이는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어렵고, 고립과 폐쇄를 고집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외부자원과 재원의 유입은 어렵게 될 것이므로 강성대국 건설은 쉽지 않을 것이다.⁵²

셋째, 국방공업 우선 원칙과 실리주의 원칙이 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성대국 국가전략은 국방공업을 앞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것을 경제전략으로 택해왔다. 선군시대의 경제는 정당 선군정치 요구를 구현한 경제, 국방공업을 선차시하는 위력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실제로 북한은 선군경제노선을 김정일 시대의 정책기조로 채택하면서 과거의 중공업 우선발전노선을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김정일이 ‘선군시

52 박헌욱, “북한, ‘강성대국 건설론’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군사논단」 제67호, 2011, p.39.

53 심은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제1호(루계 138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p.3.

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동시에 농업을 발전시키는 경제노선'을 제시했다고 하였다.

문제는 자원과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방공업을 우선시 한다는 것은 이 부문에 자원과 재원을 불균형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균형적 배분의 불가피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7.1 조치는 군수생산부문은 계획경제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민간 생산부문의 경우 분권화 조치와 일부 시장경제 기능도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실리사회주의에 입각한 시장화는 통제 가능한 시장을 넘어 계획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시장 활성화의 정치적 부담과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가 증대함에 따라 북한당국은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보수적 경제노선으로 선회하였던 것이다.⁵⁴

요약하면, 국방공업 우선 원칙은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리주의 원칙은 시장의 활성화 등 정치적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국방공업 우선 원칙과 실리주의 원칙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인민생활 향상이 강조되면서 국방공업 우선 원칙을 언급하는 빈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언적 차원의 변화일 뿐이다. 실질 경제에서 국방공업에 투자해야 할 자원과 재원을 인민경제 부문으로 전환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54 김창희, "북한 강성대국건설의 전개와 현황," 『한국동북아논총』 제60호, 2011, p.17.

2. 강성대국 실현 전망

김정일은 강성국가 진입 선포식(2012.4.15)을 4개월 남짓 앞두고 돌연 사망하였다. 김정일의 돌연사는 강성대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경제강국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김정일의 돌연사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자랑하던 사상·정치강국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선 북한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군대·인민의 일심단결, 선군정치의 우월성, 그리고 수령결사옹위 등을 정치강국의 표징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제 서른도 되지 않았고 혁명 경력도 일천한 ‘청년대장’이 김정일을 대신하여 일심단결의 중심이자 선군정치의 영도자가 되었다. 김정은은 노회한 권력엘리트들을 자기편으로 계속 포섭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며 국제적 포위망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통치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권력엘리트의 이반이나 주민들의 동요가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시대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영도자와 권력엘리트, 영도자와 주민들의 관계가 수령의 인격적 리더십에 기초한 운명공동체보다는 이익공동체로 묶여져 있으므로 이해관계에 따라 충성과 지지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따라서 김정은이 권력엘리트와 주민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거나 제공해주지 못할 경우 일심단결

55 이기동,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9), p.128.

이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난의 행군 세대가 체제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상강국이 퇴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난의 행군 세대란 북한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던 1990년대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각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세대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과 집단주의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진다. 이런 특징을 지닌 세대가 점차 체제의 중추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사상강국의 후퇴를 수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⁶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군사강국은 유지되는 가운데 사상·정치의 강국이 후퇴하고 경제강국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북한은 강성국가 진입에 성공하였다고 선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확립과 본격적인 개막을 위해 김정일이 준비해 온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강성국가 달성을 선포하여 이를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은 시대를 개막하는 터닝포인트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이용하여 김일성 수령의 2대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전수받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로 이러한 중차대한 이벤트를 채울 것인지

56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 의식변화와 체제변화,” 『북한학보』 (서울: 북한연구소, 2011)를 참조할 것.



궁금하다. 우선 북한은 선전적 차원에서 2012년 4월 15일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김일성의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찬양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약속한대로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면서 김정일의 선군혁명위업의 결실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2012년 4월 중순 당대표자회 개최를 예고하였다. 북한은 이 행사를 통해 김정은은 주체혁명위업과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카리스마를 김정은에게 전이하고자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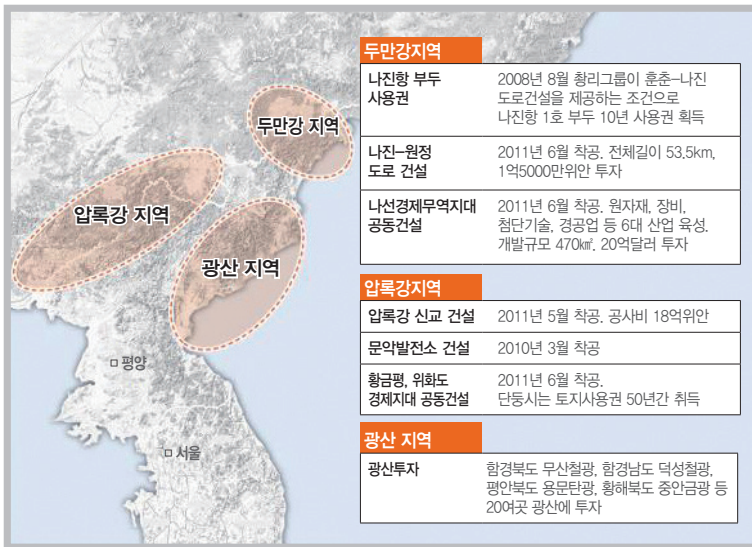
그리고 북한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2011년 8월 이후에 ‘강성대국 대문’을 ‘강성국가’로 표현하면서 강성국가란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 그리고 과학기술강국 달성에 기초한 경제강국의 ‘문어구’에 진입한 상태로 선전하기 시작하여 경제강국 달성 실패에 대비한 선전적 사전조정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런 사전조정작업은 북한 지도부가 단기간 안에 경제강국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이 기존의 대국이나 강국과 다른 점은 영토의 크기, 인구 수, 경제력, 군사력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제창한 이후 북한의 대외 의존도, 특히 대중의존도는 훨씬 증가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북한이 ‘강성대국 영마루’에서 ‘강성대국 대문’을 거쳐 ‘강성국가’로 목표 수위를 하향 조정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5〉 북한 대외무역에서 대중교역의 비중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 중 (%)	25.0	32.5	32.7	42.8	48.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2.6	56.7	67.1	73.0	78.5	83

출처 : 코트라,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중국의 주요 대북 투자 현황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당장 2012년 4월 15일이 다가오면 북한 지도부는 강성대국의 대문인 강성국가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대략적으로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 보인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완결을 사상·정치강국 실현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울 수 있다. 북한은 실제로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언급하면서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장기적이므로 혁명위업 계승에 실패하면 혁명 자체가 실패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깔아놓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완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계자 김정은에게 누가보아도 후계자의 위상에 걸맞은 공식적 지위를 전인민적 추대의 모양새를 갖춘 형식으로 부여하면서 말이다.

둘째, 북한 지도부는 2012년 4.15에 맞춰 대규모 외국사절단을 초청하여 성대한 강성국가 선포 기념식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북한주민들에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어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당분간 우호적 대외관계 조성에 역점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2012년 2월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농축 프로그램 가동 중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 IAEA사찰단 복귀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군사강국 실현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은 3차 핵실험이나 상업용 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효과적 방법으로 판단하여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차 핵실험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아마도 차선책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업용 인공위성으로 가장하면 북한주민들에게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을 제시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제사회에는 자주적인 우주공간 이용권한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2.29 미북합의'에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우리농농축 프로그램 가동 중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 IAEA사찰단 복귀 등의 사전조치 이행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면 군사강국 과시를 위한 실력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강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대문 정도에는 도달해 있다는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평양시내 10만호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본과 물자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 만수대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만수대지구의 '전변'된 모습을 경제강국 개문(開門) 성과로 활용하려는 계산이다. 또한 북한은 자강도에 있는 희천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4.15 행사 전에 완공을 목표로 김정일이 수차례에 걸쳐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다. 경제발전에서 전력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이 희천발전소 건설을 속도전으로 완공함



■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 착공식

으로써 제2, 제3의 희천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싶은 것이다.

솔직히, 북한이 최소한 생산에서 과거의 최고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인민생활 향상도 지방공업과 8·3 인민 소비품 생산과 같은 일부 외관상 성과를 제외하고는 공허한 슬로건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다만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라는 구호가 암시하듯이, 자립경제와 정보기술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즉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그리고 대계도 간석지 등 같은 중요 건설 대상, 몇몇 현대적인 경공업공장,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되는 컴퓨터수치제어(CNC) 등이 경제강국의 표징이자 대표적 성과로 선전될 것이다. 하지만 생활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적 성과만 가지고 ‘강성대국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⁵⁷

2012년 4.15 행사가 끝난 후 북한은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아마도 ‘강성국가의 영마루’를 점하자는 구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발전의 눈부신 성과를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 명실상부한 경제강국을 달성하자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강국 실현은 강성국가의 영마루를 점하자는 논리로 치환되어 김정은 시대의 국가목표가 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은 김정은 시대의 최대 화두로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57 梁문수, “경제강국 향한 고난의 행군,”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42>.

경제강국은 국방공업 우선노선을 통해 이룩한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실현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다. 즉, 과학기술강국을 군사강국과 경제강국의 과도적 연계 고리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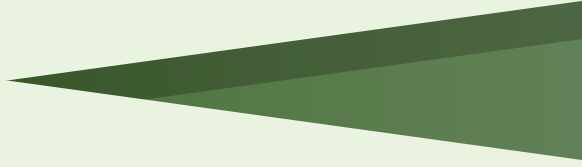
북한은 ‘일심단결’이 강성대국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무리한 주민동원과 분수 넘친 잔칫상은 오히려 ‘일심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다. 1989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체제의 허점이 만들어 졌던 사실을 새삼 상기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벌써부터 이러 기운들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한다. 4.15 잔치에 쓸 요량으로 쌀 공급을 축소 조절하여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축제가 끝난 후 북한주민들에게 주어질 황량함과 초라함이 우려스럽다.

*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4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 제 5 장 ▪

맺 음 말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의 강성대국론을 개관하였고 그것의 기능과 한계를 따져보았으며,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위기극복과 새로운 비전 제시 차원에서 등장한 북한의 강성대국론은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국가전략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비교적 원만하게 작동하였으나,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조성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전략적 기능은 정해진 목표와 주어진 현실 사이에 상당한 모순과 상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 및 강성국가 선포식은 김정은 시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어떠한 선전적 논리와 가시적 성과로 북한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인지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능력에 달려있다. 현재로서는 인민생활 부문에서 북한주민들을 설득할만한 가시적 성과는 별로 없

어 보인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달성했다고 자부하는 군사강국과 사상·정치강국 과시에 더 몰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과시의 수단으로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미봉책과 현혹책으로 당장의 난관을 무난히 넘긴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기대는 그 만큼 증대할 것인데 비해, 새로운 지도부의 정치·경제적 자원은 소진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이 새로운 지도부로 하여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면 긍정적 기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몫이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김정은 권력의 미래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성중,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4.
- 김일성, “민족올림픽위원회협회 위원장인 메히꼬출판회사 위원장 겸 사장일행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정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창희, “북한 강성대국건설의 전개와 현황,” 「한국동북아논총」 제60호, 2011.
- 박정란·강동완,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2009.
- 박헌욱, “북한, ‘강성대국 건설론’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군사논단」 제67호, 2011.
- 변상정,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 심은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제1호(루계 138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양문수, “경제강국 향한 고난의 행군,”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42>.

오현철, 「선군과 민족의 운명」, 평양: 평양출판사, 2007.

이기동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 의식변화와 체제변화,” 「북한학보」, 서울: 북한연구소, 2011.

이기동,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9.

이온죽, “북한주민들의 생활상과 의식 변화 전망,” 「월간 통일경제」(1996, 8).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 변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체계 개혁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11권 6호, 2004.

전현준 외, 「북한의 승계정치 동향: 2.16 생일행사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차문석,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한 전략,” 「사회과학」 제43권 제1호, 2011.

철학연구소,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참 고 문 헌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Wallace, Anthony,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1968.

「로동신문」사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 1998.2.3.

「로동신문」정론, “강성대국,” 1998.8.22.

「로동신문」사설,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
1999.1.16.

「로동신문」·「근로자」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1999.6.16.

「로동신문」신년공동사설, 2000.1.1.

「로동신문」·「근로자」공동논설, “강계정신으로 억세계 싸워나가자,”
2000.4.22.

「로동신문」개인 논평,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귀한 정신적 양식,” 2011.6.17.

「내외통신」, 1996.2.29: E1-E2.

「연합뉴스」, 2011.12.20.

「유코리아뉴스」, “北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 표기 의미,” 2011.12.28.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목록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었나?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18 북한의 의료실태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21 북한의 체육실태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23 북한의 대남전략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4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비매품〉

발행일 2012년 3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인쇄 현프린트 전화 02)2273-7142

“ 2012년은 북한정권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정해놓은 해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경제강국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96-14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